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3

2020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 현황과 전망

-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 현황과 전망

-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성주영 기록연구사(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 목 차

---

1. 들어가며
2. 기록관리학 교육원의 시작
3.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변화
4. 현 교육원 제도에 관해 생각해볼 것들
5.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6. 나가며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

---

본 이슈페이퍼는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교육원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록관리 교육원의 출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기록관리 교육원은 2011년도 「공공 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자격이 ‘학사’로 완화되었다. 대신 학부 전공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가 변경된 후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교육원과 시험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 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관련 제도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되었거나 생각해볼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 1. 들어가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은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기록관리학 및 유관학문 전공자가 교육원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요원 양성과정도 대학원과 교육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고, 두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재(19.8. 기준) 총 2,383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록관리 인력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7년도에 국가기록관리 혁신 TF는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과목이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기록학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전임교원이 부족하여 비전공 교수나 겸임교수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기록공동체 내에서는 교육원의 교육과정 품질(커리큘럼 허술, 기록학 비전공자의 강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도를 강화하여 석사학위 취득자에 버금가는 동등한 역량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sup>1)</sup> 또한, 2011년 시행령 개정 이후 도입된 시험제도로 인한 교육원의 학원화 경향, 시험 대비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sup>2)</sup> 법령 개정 이후 약 10여 년 흐른 시점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기록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하여 대학원과 교육원으로 분리하여 양자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교육원의 학원화와 같은 위기의식은 일단 교육원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교육원도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안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교육의 현 주소를 교육원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교육원이 양성기관으로 출발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과와 변화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2016년 제8회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의 온라인 설문조사(16. 9. 19.~9. 25.)

2) 우리의 전문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KARIM vol.04, 2016, pp. 164~165.

## 2. 기록관리학 교육원의 시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는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기록관리 관련 전문 교육·훈련을 받은자를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록학의 학문적 기반도 미약했고, 교육과정을 위한 인프라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원은 기록학의 유관학문인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기록관리 분야로 유입하여 공공기관에 배치하기 위한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명지대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공동부설로 설립된 한국 기록관리학교육원(이하 명지대 교육원)이 당시 유일한 교육원이었다.

법령에 따라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교육원을 수료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 전체 자격 취득자 2,383명 중 254명(10.7%)에 달한다.<sup>3)</sup>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원은 2010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공공부문 학력철폐라는 당시 정부의 기조 아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직문화 개방을 위해 학력 요건을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로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당시 기록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지식과 교육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국가기록관리체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기록학계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전문요원의 ‘석사학위’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가 기록원은 기록학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다.<sup>4)</sup> 기록관리 전문성을 위해 기록관리 대학원 석사학위는 유지하되, 교육원의 입학자격을 학사로 완화하고 대신 전문성 검증을 위한 ‘시험제도’ 도입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2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3) 전체 자격 취득자 2,383명 중 시행령 개정 이전 교육원 졸업자는 254명, 개정 이후 학사학위 취득 및 시험 합격자는 265명으로 각각 10.7%, 11.1%를 차지하고 있다.

4) 개정안 재검토 과정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중 기록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교육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도 제시되었으나, 기록관리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한하고 기록학 학문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 하였다.

### 3.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변화

#### ① 교육원

2011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명지대에만 있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이 이화여대, 한남대, 전북대까지 총 4대 대학에 설치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 또는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었다.

이화여대와 한남대가 2011년도, 전북대가 2012년도에 각각 설립인가를 받았고, 명지대는 2011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 재인가를 받았으나 신입생 감소로 2017년도에 운영을 중단하였다. 현재는 세 개 교육원이 운영 중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도 개정되면서 <별표 16>의 교육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교육원의 이수학점 기준과 교과목 기준만 제시하였다면, 개정 이후 이수학점·수료 기준, 교육 기간·방법 기준, 교육과목 개설 기준, 교수요원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교육원은 <별표 16>에 따른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을 갖추어야 운영인가를 받을 수 있다.

〈표 1〉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6]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제42조 관련)**

**1. 이수학점 및 수료의 기준**

가. 이수학점 기준 :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할 것

나. 수료 기준 :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최소 학점(24학점) 이상을 이수 하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자로 할 것

**2. 교육 기간 및 방법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할 것

**3. 교육과목 개설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다음의 영역별 교육과목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교육 과정으로 하되,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강좌는 반드시 개설한 과정으로 할 것

구분	교과 내용
기초영역	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
전문영역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시스템론, 업무분석론, 민간기록관리론
기타	기록관리 실습, 논문지도

**4. 교수요원 기준**

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2) 기록물관리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중 1인은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교수 요원으로 배치할 것

교육원은 1년 단기 비학위 과정으로 대부분 금, 토요일에 집중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목은 〈별표 16〉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필수 및 선택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개 대학 교육원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원 운영 현황('17~'18년)

구분	이화여대('11년 설치)	한남대('11년 설치)	전북대('12년 설치)
이수학점	24학점 (8과목/3학점)	24학점 (8과목/3학점)	24학점 (8과목/3학점)
교육기간 및 방법	1년 집합교육	1년 집합교육	1년 집합교육
교육과목	기록관리학개론 한국기록관리관련법령 기록보존론 기록조직론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전자기록물관리론 기록물시스템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보존론 기록평가·선별론 기록관리법 기록조직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정보서비스론 논문연구 기록관리실습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관련법령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전자기록관리론 전자기록관리기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교육원의 모집인원은 공공기관 채용 수요가 많고 기록관리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2〉는 이러한 연도별 교육원 모집인원의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교육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앙부처 소속기관, 대학 등의 기록연구직 일괄 채용이 종료되고, 명지대 교육원 운영이 중단된 2017년도부터 세 개 교육원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다.

〈표 3〉 기록관리 교육원별 모집인원

설치대학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3.
합계	537	23	66	65	87	96	88	44	45	33
A	181	3	17	16	25	28	26	22	27	17
B	95	10	15	-	11	14	21	10	10	4
C	122	-	11	19	22	29	19	12	8	12
D	139	10	23	30	29	25	22	-	-	-

##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은 교육원 지원자격을 '석사'에서 '학사'로 낮추는 대신 학부 전공자가 석사학위 취득자에 상당하는 균등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시험은 〈표 4〉와 같이 4개 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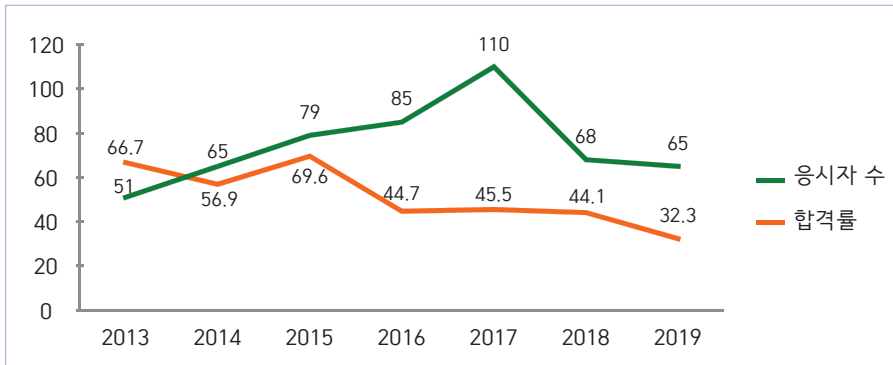


〈표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과목(시행규칙 제42조의2)

구분	과목	유형
필수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객관식
선택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기록정보서비스론 중 택2	주관식(기입형 포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은 2013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되고 있으며<sup>5)</sup>, 2019년까지 총 523명이 응시하였고, 총 265명(19.4. 기준)이 합격하였다. 지난 7년 간 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첫 시행연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응시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록연구직 일괄 채용 마지막 연도였던 2017년도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도 68명, 2019년도에는 65명으로 시험제도 도입 초창기 응시자 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림 1〉에서 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초기 3년 간 평균 64%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 이후 3년 동안 평균 45%로 하락하였다. 2019년도 시험의 경우 응시자 수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합격률은 전년대비 11.8% 하락한 32.3%였다. 이는 지난 시험 시행 7년 간 전체 평균보다 18.4% 하락한 수치이다



〈그림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응시 및 합격 현황

〈표 5〉는 기록관리 교육원별 시험 응시자 및 합격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17년도부터 운영을 중단한 명지대 교육원의 경우 기존 수료생 및 불합격자 응시 현황이다.

5)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표 5〉 기록관리 교육원별 시험 합격률 현황

교육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	응시자	8명	21명	22명	28명	38명	32명	28명
	합격자	7명	15명	21명	16명	24명	19명	11명
	합격률	87.5%	71.4%	95.5%	57.1%	63.2%	59.4%	39.3%
B	응시자	14명	5명	7명	12명	24명	14명	17명
	합격자	10명	4명	5명	6명	10명	6명	2명
	합격률	71.4%	80%	71.4%	50%	41.7%	42.9%	11.8%
C	응시자	5명	12명	13명	15명	31명	12명	15명
	합격자	0명	5명	5명	4명	8명	4명	6명
	합격률	0%	41.7%	38.5%	26.7%	25.8%	33.3%	40%
D	응시자	24명	27명	37명	30명	34명	10명	5명
	합격자	17명	13명	24명	12명	8명	1명	2명
	합격률	70.8%	48.1%	64.9%	40%	23.5%	10.0%	40.0%

국가기록원은 1회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매년 약 1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문제은행 구축, 문제 선정과 출제, 시험 집행 등에 투입되고 있다. 문제은행 구축에는 기록관리학 교육기관의 교수·강사, 현장 전문가, 내부 전문가 등이 과목별 위원으로 참여한다.

〈표 6〉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시험 운영에 투입된 인력과 소요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합숙장소 임차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매년 약 9,5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표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소요예산 및 인력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입 인력 (명)	계	696	97	100	106	98	99	99	97
	문항개발	372	53	54	51	55	54	51	54
	합숙출제	184	25	27	36	24	24	24	24
	시험집행	140	19	19	19	19	21	24	19
소요 예산(천원)		542,497	53,291	53,291	52,742	95,865	95,698	95,745	95,865

## 4. 현 교육원 제도에 관해 생각해볼 것들

시행령 개정 이후 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기준이 완화되고, 시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원의 교육과정도 불가피하게 개편되었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총 265명(19.4. 기준)이 교육원과 시험을 통해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다.

이처럼 제도가 바뀐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자격 취득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교육원 과정의 전문성이나 시험제도의 실효성 등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 교육원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 볼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원이 설치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다. 현 교육원은 당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 기초 하에서 정부와 학·협회, 여러 유관기관 간의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것은 그 당시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불가피하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제도 변경 당시와 달리 공공기관의 전문요원 배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현실적인 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제도가 바뀐 2011년도 이후 지금까지 매년 평균 172명의 전문요원이 대학원<sup>6)</sup>과 교육원을 통해 배출되었고 자격취득자는 총 2,383명(19.8. 기준)에 달하는 반면, 2017년도에 기록연구직 일괄 채용이 완료되는 등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축소되어 인력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이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요원 배치비율을 늘리는 등 인력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전문요원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러한 수급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양성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교육원의 교육과정이 기록관리 현장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지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규제 완화라는 행정논리에 떠밀려 양질의 기록관리 전문가를 공급하는 데 차질을 빚어온 것은 아닌지, 그 당시 차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 운영 프로그램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우수성 강화를 위한 프로

6) 2011년도 이후 기록관리 대학원 과정 6개가 신설되면서 현재 25개의 기록관리 대학원 과정이 운영 중이다.

그럼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 교육원은 1년 비학위 과정으로 대부분 주말 집중 강의로 이루어지고 시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1년 속성 과정이라는 것이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험 중심의 교과운영은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자격시험 대비 수업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sup>7)</sup>가 들려오는 이유이다. 기록관리 현장에서 전문요원은 기관의 업무기능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한다. 시험과목 위주로 단순히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키우고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육원은 법령에서 명시한 시험 필수 및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시험과목 이외에도 행정론, 민간기록관리론, 실습 등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교과목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실습 과목은 전문요원이 현장에서 기록전문가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원의 태생적인 한계와 함께 현장 실습 여건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시험과목 이외의 다양한 기록관리 관련 교과목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록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치우친 교육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시험 위주의 운영이 교육원의 학원화 우려를 낳고 그 결과 기록관리 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더욱 요원해지는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 교육원 제도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일부 인정된다. 교육원 입학생은 교육원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이고, 교육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출시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원이 단순히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하나의 학원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요원은 한 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그에 합당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명실공히 교육원은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토해 볼 문제는 교육원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요원의 학문적 배경이다. 기록이 다양한 업무 배경에서 생산되고 관련 학문 분야도 분화 또는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관리의 배경학문을 역사학과 문헌정보학으로 한정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7) 우리의 전문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KARM vol.04, 2016, pp. 164~165.

기록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보존, 활용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데이터, 정보이론 등 관련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역사학과 문헌정보학으로만 제한된 교육원 지원 자격을 다양한 전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전공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 전공자에 대한 기록관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원 운영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전문요원 시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기록원은 2013년부터 전문요원 시험을 주관해 오고 있다. 2017년도 이후 시험 응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시험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응시생 수와 관계없이 시험출제에 필요한 인력, 출제 장소 등 관련 예산은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의 경우 응시자(65명) 1인당 약 150만원이 소요되어 지나치게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요구가 많았었다.

시험 운영 측면과 함께 시험 자체가 전문성 검증 수단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된 필기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전문요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기록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기록관리의 전문성은 기획과 분석 능력이지만 ‘필기시험’이 이러한 능력 여부를 제대로 평가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5.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국가기록원은 교육원 제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교육원의 본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자인 교육원과 관련 학·협회와의 논의,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법 등을 찾고 있다.

교육원 교육과정의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상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고민하고 있다. 시험 과목 이외의 다양한 기록관리 관련 교과목들을 운영하면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과목의 수와 이수학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개편되는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 전공과목을 확대하고 이수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전문요원 시험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필기평가 중심으로는 교육원 수료생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겹쳐히 수용해야 한다. 필기를 중심으로 하되, 주관식 강화, 구술 방식 도입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또한 그동안 축적된 문제은행과 기출문제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 수준과 품질을 재정비하는 등 교육원 수료생의 지식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문성 평가 측면에서 시험제도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전문요원이 기록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본질은 기록학을 전공한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록관리의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자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되돌릴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sup>9)</sup>

이와 함께 기록학, 역사학과 문헌정보학만으로 제한된 전공 분야를 급속하게 세분화 되는 학문 분야와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선 또는 확대해야 한다. 어떤 학문이 기록관리 분야에 왜 필요한지, 즉 유관 학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기록관리 업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3〉에 명시된 ‘연구직공무원 응시자격 구분표’ 개정도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통계수치에 입각한 논리적 근거를 찾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등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존 대학원의 충분한 인력 양성 등의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고 응시자 감소라는 현실에 적합한 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교육원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들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내부 연구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의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찾고 이를 제도개선에 신속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8) 국가기록원은 2019년도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험제도 개선안을 시험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객관성과 균질성 보장 등을 위해 지금의 시험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9) 학력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한 교육원 개선 방향에 대하여 2019년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원 교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6. 나오며

지금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기관인 교육원과 시험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현주소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살펴보았다.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결국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관리를 둘러싼 환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된 20년 전과는 달라졌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의 유형과 그들이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은 이전보다 더 다양해졌다. 기록은 대부분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다.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은 무엇이고, 현 양성과정이 이러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양성기관인 교육원과 정책기관인 국가기록원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의 두 개의 축 중 하나인 교육원과 시험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인 대학원의 기록학 석사학위자에 대한 전문요원 자격인정 제도는 대학원 인증제도, 공표제도 등과 연계해 검토해 나가되,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율적 개선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교육원과 교육과정 운영, 시험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바람직한 전문요원 양성제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발간호	제목	작성자	발간일
vol. 1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황정원 기록연구사	2019. 10. 8.
vol. 2	「공공기록물법」 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① 기록의 개념과 성립요건 - 정보와 증거로서의 기록의 함의를 기록물법에 적용하기 - ② 기록이란 무엇인가?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젠마 서기관  임신영 기록연구사	2019. 10. 22.
vol. 3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방안	윤정훈 행정사무관	2019. 10. 31.
vol. 4	“도전! 기록관리 명감사되기” 기록관리 감사양성제도 도입	김명옥 사서사무관	2019. 11. 15.
vol. 5	국가기록원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의미와 전망	왕호성 기록연구사	2019. 11. 22.
vol. 6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의 방향	이지영 공업연구사	2019. 12. 5.
vol. 7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김현숙 공업연구사	2019. 12. 12.
vol. 8	건축아카이브의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 ICAA BRAGA 2019 참가기 -	김수연 전문임기제 허인영 전문임기제	2019. 12. 13.
vol. 9	전자기록 장기보존패키지 모델 시험과 새로운 모델 제안	신동혁 공업연구사 김상국 전산사무관 나미선 학예연구관	2019. 12. 17.
vol. 10	기록물 매체수록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박지혜 공업연구관	2019. 12. 24.
vol. 11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2018년 생산분)	김현애 기록연구사	2020. 1. 15.
vol. 12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하정하 기록연구관	2020. 1. 29.
vol. 1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 현황과 전망 -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성주영 기록연구사	2020. 2. 12.
vol. 14	기록관리 지원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심층인터뷰 방안	정경택 공업연구사 나창호 기록연구관	2020. 2. 26. 발간 예정

### 발간 예정 목록

-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 속기록 생산의무 회의 지정제도
- 기록관리 정기실태점검을 통해 본 기록관리 방안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 특수지 기록물과 보존
- 국가 중요기록물 보존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사업>, 10년을 돌아보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
- 국외 소재 한국 병풍 <오륜행실도> 복원처리 지원을 위한 영국박물관 방문기

※ 향후 이슈페이퍼의 주제 및 발간 일정은 원내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현장의 다양한 현안 논의와 기록인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성과 공유를 기다립니다.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 ☎ (042) 481-6353 ✉ [issuepaper@korea.kr](mailto:issuepaper@korea.kr)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481-6353 Fax 042-481-6234